정준호·오월단체,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 논의

'옛 광주교도소 역사적 가치·활용 토론회'

중앙부처·전남광주시와 협의…걸림돌 해소

鄭 "공법3단체, 광주교도소 활용 반대 안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 광주교도소의 미래 활용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오랫동안 부지 활용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관계기관 협의 문제와 5·18 관련 단체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를 위한 실행 전략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북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기억의 터에서 미래의 지식으로'를 주제로 '옛 광주교도소의 역사적 가치와 미래 활용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북구갑 지역위원회와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가 공동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옛 광주교도소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전제로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 가능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정 의원과 민주당 북구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구의원,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남광주지역본부의 안내로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현장 답사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시설과 부지 현황을 직접 살펴보며 역사적 가치의 보존과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를 연계한 공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미래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개발과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광주시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까지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5·18 관련 단체의 입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옛 광주교도소를 국회도서관이나 그에 적합한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면 5·18 공법 3단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5·18 공법 3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도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옛 광주교도소를 광주시민 모두를 위한 뜻깊은 공간으로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다른 지역과의 유치 경쟁 속에서 무엇을 보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옛 광주교도소는 1980년 5월 계엄군의 폭력과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던 역사적 현장이다. 1971년 북구 문흥동에 들어선 이후 2015년 교정시설이 이전하면서 부지 활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18 사적지의 역사적 원형과 기억을 보존하면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와 지식정보·교육·연구·문화 기능을 결합하는 새로운 공공공간 조성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신응주 조선대 건축학과 교수는 역사적 핵심 구역과 공공 활용 구역의 체계적 구분, 원형 보존과 새로운 건축물의 조화, 시민참여형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박주현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국가 도서관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을 진단하고, 국회부산도서관 사례를 바탕으로 호남권 국가 지식정보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도서관 광주분관을 민주·인권·평화 기록의 보존과 의회민주주의 교육, 지역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지식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수 기자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2027 예산안 토론회 조정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5·6일 '2026 국회 입법박람회' 개최

입법·정책 제안 부스 운영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5·6일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주는 '입법·정책 제안 부스'를 운영한다. 국민과 기업이 현장의 과제를 제안하고, 국회가 이를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국회, 정당,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제·산업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총 88개 기관·기업·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채로운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전시한다.

부스는 국회 중앙잔디광장 내 ▲경제존(경제·산업) ▲미래존(학생·청년) ▲입법존(정당·정부·공공기관·지자체·시민단체 등) 등 3대 전시 공간에서 운영된다.

조정식 의장은 "입법·정책 제안 부스는 다양한 기업 및 단체들이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현장의 제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기업 성장에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미래도약 국회', 국민 삶을 지키는 희망의 울타리가 되는 '민생효능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도농복합지역까지 확대해야"

전남광주시의원 13명 공동성명

지원 기준·확대 일정 마련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구상에서 제외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2일 전남광주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전남광주시의 지원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면 시행이라는 설명과 달리 구상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안군은 신도시 인구 유입과 기존 농촌의 현실을 구분하고, 나주·순천·여수·광양 등 도농복합시도 도시 전체의 인구와 산업 규모만으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외 지역의 선정 근거와 검토 과정을 공개하고, 읍·면·동별 인구 변화와 고령화, 농어업 기반,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재정 분담과 관련해서는 "국비 부담률을 80%로 높이고, 나머지 지방비의 80%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비 없는 자체 사업도 전남광주시 부담률을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모든 지역에 당장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단계적 시행이라면 제외 지역의 지원 필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언제 어떤 절차로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다음 단계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남광주지역에서는 곡성·신안·구례·보성 4개군이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인구감소지역 12개군도 3차 공모를 준비 중이며 전남광주시는 신청 서류를 취합해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3대 메가,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도전…속도전 절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포럼서 강조…"병목 극복 전략 必"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이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틀을 바꾸는 가장 큰 도전"이라며 속도전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2일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증설 논의를 넘어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며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면서도 더 큰 시장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지컬 AI와 관련해선 "해외 테크 기업이 이미 우리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찾아 나서고 있다"며 "현장 데이터 권리의 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AX 활용과 보안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만들며, 제조 현장 노하우가 청년에게 전수될 길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에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제도·인프라·인재·기술혁신의 병목을 극복할 전략 보완과 실행 계획의 수립, 그리고 그 협업과 속도전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기조 발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았다. 패널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반도체·피지컬AI 등 각 분야의 핵심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